



오색 다문화 떡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둔 9일, 광주 북구 중흥3동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주민자치센터 강당에서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함께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할 떡국 떡을 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표문화전당 개관 준비”

김종덕 문화부장관 밝혀... ‘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 개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아특별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개관 준비를 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답변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와 동시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법안 의결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 의결이 미뤄진 것은 아특별 개정안 때문이었다.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정부 측에서 부처 간 이견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고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 등 다수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의사전행 발언을 통해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 상임위 상정도 안 된다면 법안소위가 왜 필요하냐”고 따졌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당시 법안 소위에 문체부 차관과 실국장들이 참여해 동의하지 않았느냐”며 “법안 통과 후 제동을 거는 정부의 태도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같은 당 박홍근·배재정 의원 등도 가세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위 의결 때 문체부와 타부처 간 의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고, 법안 의결 후 타부처에서 이의를 제기해왔다”며 “여야 의원들께서 한번 더 협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아특별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현행법대로라면 문체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법 개정 없이 법인에 위탁할 수 없으며, 문체부의 고유업무로 개관을 준비해야 한다”며 “현행법에 따라 9월4일 개관을 위해 전당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법 개정을 전제로 개관 준비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타한 것이다. 이에 김종덕 장관은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 개관이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국가기관으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교문위는 10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아특별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차기 총선·대선 ‘정치 혁신’ 주도해야

‘호남 표심’ 길을 묻다

새정치 전당대회 당심 결집 ‘호남의 힘’ 보여줘

새정치 새 심장으로

대승적 선택 통한 국가 미래의 ‘방향타’ 역할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를 통해 호남 표심의 존재감이 확인됐다. 당권 경쟁에서 박지현 의원이 3.52% 포인트 차이로 문재인 후보를 턱 밑까지 추격하고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배경에는 호남 민심과 당심의 결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침묵했던 호남 민심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주류인 진노(진노무현) 세력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평소에는 전국정당화를 명분으로 ‘탈호남’을 주장하고 선거 때만 호남을 찾는 행태에 호남 출신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이 결집했고 이는 호남 민심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당내 최대 계파의 수장이었던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은 호남 민심의 결집에 순식간에 붕괴됐다. 전대 당일,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당선 여부를 초조하게 걱정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60년 역사를 이어가는 적통이자 심장인 호남 민심의 지력이 유감없이 발휘됐다는 평가다. 이러한 호남 민심의 결집은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과감한 혁신과 통합을 주문하는 효과를 냈고 있다. 통합과 혁신을 통한 정권 창출의 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호남 민심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호남 민심이 새정치연합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새정치연합의

상황은 호남 민심의 지지 없이는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신당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고 분당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 민심이 흔들린다면 새정치연합이 4월 보선에서 전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 호남 민심의 결집은 결국 ‘혁신’으로 집약된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에도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감한 도전과 문제 제기보다는 계파 줄타기를 통해 기득권에 안주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심의 흐름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더욱 강력하고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선 차리지 못한다면 정치·경제·문화·사회 전반에서의 호남의 위기와 고통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의 위기 국면에서 호남 표심의 역할론도 나오고 있다. 호남 표심이 야권 혁신

의 동력이 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 표심이 과거 평화적 정권교체와 정권 재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호남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귀결되며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냉철한 결단과 희생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호남 민심이 보수정권 10년 동안 뒤늦게 문체부 차관과 실국장들이 참여해 동의하지 않았느냐”며 “법안 통과 후 제동을 거는 정부의 태도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

해”라며 “같은 당 박홍근·배재정 의원 등도 가세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위 의결 때 문체부와 타부처 간 의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고, 법안 의결 후 타부처에서 이의를 제기해왔다”며 “여야 의원들께서 한번 더 협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FOM, 전남도에 “F1 위약금 물어라”

F1 대회 주관사인 포몰러원 매니지먼트(FOM)가 F1 대회조직위원회에 ‘중대한 계약사항 위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F1 대회와 관련 위약금 지급 여부, 2016년 대회 개최 여부 등을 둘러싼 FOM과 F1 조직위 간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9일 F1 조직위는 “지나해 말 FOM 측이 2015년 대회 개최권을 지급하기 위한 신용장(L/C)을 외국(통상 영국)은행에 개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계약사항 위반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이는 FOM이 F1조직위의 계약위반을 명시하면서 위약금 요구 등 권리 행사를 나서겠다는 압박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지난해 말 FOM은 2015년 스케줄에서 전남 영암을 대회 개최지에 넣었다가 제외시키는 등 협상을 앞두고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F1 조직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속 협상은 해왔지만 이번에는 공식 문건이 왔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것 같다”며 “2012년, 2013년 F1 대회 때도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회 개최권을 계약 위반으로 보는 FOM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F1 조직위는 그동안 경기장 등 시설 설치 및 대회 개최로 인한 전남도의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위약금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학부 추가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육원, 음악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유아교육과, 실용음악학과
문의전화 ▶ 2, 16 ~ 22(월) 062)605-1114
대학원 추가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문의전화 ▶ 2, 9 ~ 23(월) 062)605-1115

野 수석 최고 주승용 인터뷰 ▶ 3면

디자인을 밝히다
The New generation CL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산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두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CLS 250 BlueTEC 4MATIC Coupé 2,143cc, 1,90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4.3km/ℓ (도시연비: 12.8km/ℓ, 고속도로연비: 16.8km/ℓ), 2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30g/km • CLS 250 BlueTEC 4MATIC Shooting Brake 2,143cc, 1,97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3.4km/ℓ (도시연비: 11.9km/ℓ, 고속도로연비: 15.9km/ℓ),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8g/km • CLS 400 2,996cc, 1,80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0km/ℓ (도시연비: 8.8km/ℓ, 고속도로연비: 11.9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77g/km • CLS 63 AMG 4MATIC 5,461cc, 2,01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 (도시연비: 6.1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6g/km • CLS 63 AMG 5.4MATIC 5,461cc, 1,995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 (도시연비: 6.2km/ℓ, 고속도로연비: 8.6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5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